

행정구역 개편 논의 ... 광주·전남 어떻게 될까

# 전남, 전북·경남 일부 합해 10개 광역시로

## 광주, 구 단위 없어지고 현재 광역시 그대로 유지

## 국회의원·공무원 반발 예상 ... 실현 가능성 미지수

정치권이 현행 광역시와 도(道) 체제를 폐지하고 전국의 시·군·구를 묶어 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공무원 사회에 회오리를 몰아오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 의견 접근을 이룬데다 구체적인 방안 등도 도출된 상태여서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조명해 본다.

◇정치권 논의 상황=민주당 제1정책위의장인 유윤근 의원(광양)이 지난달 28일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여개의 자치단체로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하태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하며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즉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물론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점차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제개편 방안=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3개안이 제시됐다.

우선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

하자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능 분리'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뒤,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또, 신설되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준 자치단체로 전환(구청장 직선이나 임명, 주민 직선 의회 및 구정협의회 구성)하거나 지난 91년 이전의 행정구(구청장은 광역시장에 임명, 구의회는 미구성)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 상황이다. 기타 개편 방안으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광주·전남 상황=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한다면 광주광역시도 산하 구 단위는 없어지고 현재와 같은 광역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은 전북과 경남의 일부 시군과 합쳐져 10개의 광역시로 나뉘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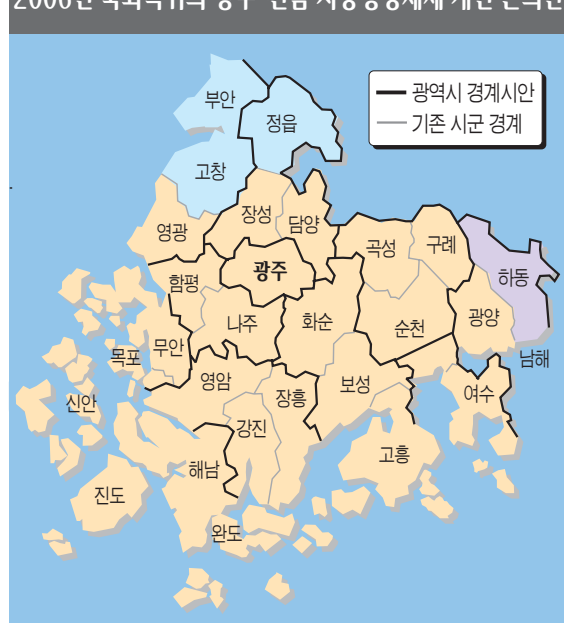
즉 곡성·구례·순천, 광양·하동·남해, 화순·보성·고흥, 해남·완도·진도, 목포·무안·신안, 함평·나주, 영광·고창·부안, 장성·담양·정읍, 영암·장흥·강진, 여수 등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론만 된 단계여서 지역간 통폐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된다면 추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실화 가능성=일단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정계나 관계의 전반적인 관측은 회의적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 공무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행정구역 개편이 국회의

2006년 국회특위의 광주·전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원 지역구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 지역 간의 반발도 변수다. 지금까지 수차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점이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시기도 문제다. 올해 하반기에 시작,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010년 5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수뇌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가다닥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여야 수뇌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일 국회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혁신도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 혁신도시 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 주장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안에 있는 기존 대도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특화된 기능별로 연계시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 도시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대표 최인기 의원)이 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유용 상임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참여정부의 도시(행정·혁신·기업도시 등) 정책은 조정 가능한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혁신도시와 권역별 특화발전"이란 주제 발제문에서 "각 권역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현 계획을 제시해 지역특화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비수도권과 공생할 수 있는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12명의 17대 국회의원들이

전원 재당선된 것만 보아도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기대를 알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주체는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받아들여 향후 혁신도시 추진일정 및 재원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을 이룬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제시하고 차질 없

는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로 나선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높은 조성원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기존의 세제 지원 외에 기술 지원, 시장 개척, 자금난 해소 등의 기업에 해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합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기능적 집중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관성이 높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꾸고자 한다"며 "광역단위로 지역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지방에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도업 국토해양부 차관은 "혁신도시별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도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대표 “혁신도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모임은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며 "균형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인 명운을 다루는 사안으로 균형발전 추진은 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임에 속한 의원 14명이면 국회에서 그 규모가 4번째로 큰 정당이다"이라며 "(소위) 혁신도시 정당은 혁신도시 성공에만 매진하는 열네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혁신도시가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교사위원장에 김동식 의원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김동식(70·서구 2) 의원이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 5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에 김동식(70·서구 2)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어 6표를 얻은 나종현(65·남구 2)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실시된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했으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당선되지 못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원출(49·서구4)의원이 지난 7월 29일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치러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 저소득근로자 포함해야”

### 강운태 의원 조세특례법 수정 주장

무소속의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국회 상임위에 서 송곳 질의와 함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복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강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유가 대책으로 실시할 예정인 유가환급금(6만~24만원) 지원 대상에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 극복



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혼여행·가족여행·개별여행은 편리한 무안공항에서 출발!!

# 무안국제공항출발

2008. 10. 12~12. 19

발리  
홍콩  
파타야  
푸켓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면 좋은점!

1. 국내선 정비철도 2. 시간절약 3. 여유로운 서비스 4. 편안한 승차환경 5. 물류 처리 편의

**항공엑스프레스항공(AO) 특가기**

- 4박5일 출발 - 10월 12~13일, 17~18일, 24~25일, 31일
- 2박3일 출발 - 10월 17~18일, 24~25일, 31일
- 기... (text partially obscured)